



화폐의 종말(Death of Money)*

홍기택 (초청연구위원, 중앙대 교수)

화폐는 컴퓨터 전산망 속의 숫자묶음

미국 뉴욕 타임즈 신문의 경제 컬럼니스트인 커츠만氏가 최근 화폐의 종말이란 책을 내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해, 이제 화폐는 지폐나 수표와 같은 유형의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로 구성된 무형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화폐의 종말은 월남전 경비충당으로 인한 심한 무역적자와 인플레이션 및 실업 속에 시달리고 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1년 8월 15일 미국 달러화와 금과의 태환성을 중지시킨데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외국인들이 원할 경우 35달러당 금 1온스를 교환하여 주던 제도를 폐기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오던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국제통화제도가 붕괴되고 세계의 주요 통화들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한편 달러화 불태환 조치 이후 달러화 발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자, 미국 정부는 실물경제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러화를 발행하여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사이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물경제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문을 지칭하는 반면 금융경제는 금융자산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문을 의미한다. 이같은 괴리현상은 그 이후 나타난 여러가지 요소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화되었다. 금융시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졌는데,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 덧붙여 옵션시장 및 선물환시장까지도 등장하여 모든 금융자산이 어떤 형태로든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 이 논문은 Joel Kurtzman, *The Death of Money : How the Electronic Economy has Destabilized the World's Markets and Created Financial Chaos*, Simon and Schuster, 1993에 대한 書評임.

이같은 시장확대가 가능했던 것은 금융상품 가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많은 금융기법들이 개발된데 부분적으로 그 원인이 있다. 이에따라 여태까지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못해 거래가 불가능하였던 옵션 등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 이후 컴퓨터 발달로 대표되는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은 금융거래를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다. 사실이지 휴대용 PC만 있으면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금융상품거래 전산망에 연결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미국 GM사가 자동차를 외상으로 판 대금이 금융자산화되고 이를 일본의 연금관리기금들이 구입하는 등 금융자산 거래의 내용과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 역시 성행하게 되었다. 단기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획득하여 이를 분석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사실이지 메릴 린치나 골드만 앤드 삭스 등 대형 증권·투자금융회사에서는 금융자산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이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면 이들 프로그램은 수 초안에 처리, 분석하여 주식등의 금융자산의 매수, 매도 여부를 결정해 준다.

지나친 머니게임으로 실물경제는 멎들어

과연 이와 같은 의사결정이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저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오히려 이러한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하여 주주들로 부터 주가관리 압력을 받는 기업의 경영자들은 장기적 수익성을 추구하는 시설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합병이나 분할매각에 더 큰 노력을 경주하게 되어 미국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등장할 때마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금융거래가 성행하여 거래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1991년중 전세계의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된 외환만 해도 8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중 실제로 무역거래에 사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옵션거래, 주식투기, 채권거래등 금융거래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되어 “금융경제”는 “실물경제”보다 현재 20 내지 50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사이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단기 금융거래의 확대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이는 실물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시장 투기는 외환가격을 불안정하게 하여 국제 무역거래를 위축시키고 주식가격의 불안정은 기업경영자들로 하여금 주식가격 관리에만 집착하게 한다. 금융자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이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초단기적으로 행하여짐에 따라 나타난 대표적인 시장실패가 1987년 10월 19일의 이른바 블랙 먼데이(Black Monday)이다. 이날 미국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되면서 가격이 22.6%나 하락했으며 이는 곧바로 전산망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파급되어 세계의 거의 모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대폭적으로 하락했던

것이다. 이 원인을 규명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거래의 전산프로그램이 단기적인 정보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주가하락시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위험은 컴퓨터로 연결된 금융거래 전산망이 기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전세계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 어느 작은 부분에서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그 파급이 엄청날 소지가 있다. 실제로 1985년 11월 21일 미국 뉴욕은행의 전산소프트웨어가 한나절 고장이 난 적이 있는데 이때 미연방은행이 간여하여 230억 달러를 대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은행은 파산하고 금융시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이다. 컴퓨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날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한다.

금융기법의 발달로 금융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져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중앙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의 정책수행능력은 약화되고 금융시장은 대형금융기관들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중앙은행에 의해 창출된 본원 통화 이외에 금융조직을 통해 창출되는 신용통화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민간의 필요에 따라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한편 달러화의 신용창출은 전산망을 통해 미국 밖의 다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통화공급조절 능력은 약화되고 금융정책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민간금융기관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또한 주식, 선물, 옵션시장 등이 제각기 다른 기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들 규제의 차이점에 따른 순간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실물시장 역시 불안정해지고 제조업체들은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미국 내에는 금융기관과 같은 서비스 업체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통신, 컴퓨터 산업 등만이 발달하게 되었다. 국가간 산업의 재배치로 인해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구조적 실업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같은 구조적 실업의 증가로 일부 계층의 무력감이 확대되고 이는 지역주의, 민족주의를 부추겨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변화와 경영혁신은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이에 소외된 계층에 의한 지역주의 감정은 오히려 심화되어 지역분쟁으로 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미국경제의 불안정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시장에 관한 규제부터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기성 금융자산의 거래세를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증대시켜 순간적 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억제하여야 하며 통화정책 당국도 엄격한 통화공급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명목금리를 낮추어야 미국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무역정책 역시 미국 산업의 해외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의 경제정책담당자들은 시장에

관한 맹목적인 신뢰로 부터 벗어나 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개입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가 더 이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졌고 이에 따라 경제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기구의 자율적 조정기능에 맡기어야 하며 국제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저자는 오히려 정부주도에 의한 한국 경제성장 성공사례를 미국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금융경제의 확대가 실물경제를 멎게 했다”는 저자의 지적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재무관리 전공 학자들은 전산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기법으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 출현시 금융자산차익 획득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에 의하면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내저축 부족, 과도한 의료비 지출, 비효율적인 교육제도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과도한 투기적 금융부문의 발달은 억제해야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분야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나름의 종합적인 방향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시장 발달이 실물경제와 괴리되어 단기적인 금융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단기적 이익추구를 위한 합병, 매수 등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며 증권시장 육성 역시 지금과 같이 명목적 규모확대에만 치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을 우리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시켜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경기회복시 가명계좌를 이용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단기이익추구 행위가 심화되어 증권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질 소지가 크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초단기 투기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져 증권시장의 불안정요인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현재 발표된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및 채권이자와 주식배당금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종합과세하고 주식거래차익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거래세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예금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행위는 실물시장으로 그대로 자금이 연결되는 반면 주식거래는 대부분 실물시장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는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예고되어 있는 이자소득종합합산 과세제도 아래에서는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으로 부터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이는 저자가 말하는 “실물경제”의 희생 위에 “금융경제”를 더욱 증가시키게 되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상품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품선물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선물시장을 육성하고 나아가 금융 옵션상품의 도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선물시장의 육성방안을 보면 상품선물과 금융선물 시장을 구분할 것인지의 여부와 주무부처 선정을 놓고 재무부와 상공부, 기획원이 대립되어 있다. 본 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금융선물이건 상품선물이건 또는 주식시장이건 채권시장이건 간에 모든 금융거래가 새로운 금융기법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위와 같은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종류의 금융시장을 개설할 경우 기존의 금융시장의 규제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용 금융거래에 필요한 예치보증금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에서 크게 차이가 나면 이를 이용한 금융상품 교차거래기법이 개발 되어 초단기이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만 활성화될 뿐 규제의 효율성은 저하된다.

서평자 약력

- 서강대학교 경제학박사(1975)
- 미국 Stanford대학교 경제학박사(1983)
- 한국은행 조사2부 행원(1975~76)
- UNIDO Consultant(1991~92)
- 중앙대학교 정경대학 교수(1984~현재)
-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1993~현재)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Post-Capitalist Society)*

주 한 광 (초청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지식이 자본을 대신하는 21세기

18세기 말의 산업혁명시대처럼 오늘날 또 다른 전환시대가 시작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즉 탈자본주의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탈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유시장체제 아래서 자본과 노동 대신에 지식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다. 지식은 일반지식·교양지식·전문화된 지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 중요하게 여겨진 전문화된 지식이란 경제적 성과에 주목한, 실용성과 기능을 가진 지식, 곧 생산자원으로의 지식을 말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계급체계를 이루었으나, 탈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전문화된 지식을 지닌 지식근로자들, 그리고 서비스근로자들이 새로운 계급체계를 이루게 된다. 즉 지식사회(knowledge society)가 되는 것이다.

오늘의 선진국이 이미 그렇듯이, 탈자본주의사회는 조직체들의 사회(society of organizations)가 된다-1945년 이전에는 조직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직체 또는 조직은 공동 과업을 위해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로

* 이 논문은 Peter Drucker, *Post-Capitalist Society*, Harper-Business, 1993에 대한 書評임.

이루어진, 인위적인 집단이다. 예컨대 기업, 협회, 학교, 병원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사회, 지역사회, 가정 등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조직체는 전문적, 인위적 집단으로서 공동과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탈자본주의사회에서 지식과 조직체가 결합하여 경영혁명(management revolution)이 일어난다. 산업혁명 이후 지식의 적용이 세 가지 국면을 거치며 변화하였다. 1750~1850년에는 지식이 작업도구, 제조공정, 제품에 적용되어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1880~1940년에는 지식이 작업의 연구와 작업의 분석 그리고 작업의 공학화 등 작업 자체에 적용되어 생산성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1945년 이후에는 지식이 지식 자체에 적용되면서 경영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경영혁명 아래서 경영이란, 조직체를 통해 최선의 방법으로써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자는 지식의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의 활용과 그 성과에 직접 책임을 진다.

경영혁명 아래서 지식에 기초한 조직은,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각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지식근로자와 서비스근로자는 조직의 핵심과업에 집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부단히 자기개선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게 된다. 그리고 조직은 전문화되고, 조직의 핵심업무가 아닌 비핵심업무는 바깥에 용역을 의뢰한다. 전문화된 지식이 갈수록 빨리 변화하듯이 조직도 빨리 변화하고 유연성이 높아진다. 또 조직은 차차 비국가적이 된다.

이러한 경영혁명의 탈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자원, 즉 노동, 토지, 자본 등으로부터의 수익은 줄어들고, 지식 및 정보로부터의 수익이 늘어난다. 따라서 사물의 유통·이용보다 지식의 유통·이용을 중심으로 기업이 재조직되어야 한다.

기업 조직체의 사활은 지식이 좌우

저자가 전망하는 이러한 탈자본주의사회로의 전환의 진원지는 선진국이지만, 이 전환의 파장은 세계경제지평을 넘어 개발도상국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세계화 추세에 대응한 적극적인 국제화, 특히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증대가 중요하다. 세계경제에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간 초경쟁 속에서 실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경제지상주의가 세계화를 재촉한 결과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이 사라진다는 것은 경쟁의 영역이 범세계적으로 통합됨을 뜻한다.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화의 시대에는 자본과 노동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공급이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때 특정국가 또는 지역 내의 자본과 노동 등 부존자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에 산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여부가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국제화 시대에 중요한 것은, 어느 국민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느 국민이 어떤 숙련된 기능과 생산성을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예컨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토지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있지만, 기술, 즉 지식의 이동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써 우리의 숙련된 기능과 생산

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다름아니라 저자가 강조한 지식생산성의 제고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생산성의 제고는, 산업의 지식산업화 및 기업·학교·언론간 관계의 재정비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모든 산업에 걸쳐 지식산업화를 실현해야

둘째, 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산업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산업과 지식의 성격에 따라서 지식산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식산업화란 각 기업과 산업을 지식 및 정보를 중심으로 재조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을 활용하는 것에는, 저자가 분류하듯이 개선·개발·혁신 등이 있는데, 이들 세 종류의 지식 중 각 산업의 형편에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제조공정·제품·서비스의 개선, 혹은 새로운 제조공정·제품·서비스의 개발, 혹은 순수한 혁신 등을 각 산업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로써 끊임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양산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의 투입으로 생산성 향상 여지가 있다면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산업에 새로운 지식을 투입할 수 있는 조직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섬유산업, 신발산업 등에서 지식을 통한 품질과 생산성의 개선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이들 산업에서의 지식산업화라고 할 수 있다.

텔리컴unik케이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로봇, 신소재 등 이른바 두뇌산업에서 국가간 경쟁력이 치열해질 텐데, 이들 두뇌산업에서 비교우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인적요소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텔리컴unik케이션과 컴퓨터 산업에서 비용의 80% 가량이 지식에 관련된 것이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국가의 경제력을 한시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해당 제조업과 연계함으로써 산업간 지식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선공업의 발달은 해상교통 및 해운산업에서의 비교우위를 수반하게끔 해야 한다. 반도체와 PC산업의 비교우위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통신산업 등에서의 비교우위와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지식의 투입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지식생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셋째, 기업·학교·언론 사이의 관계를 지식경제 및 지식산업화의 측면에서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교육에서 지배적인 주입식 교육의 장점은 배우는 습관을 갖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혹은 지식습득을 위한 규율이 있게 한 것이다. 한편, 창의성 함양 교육이 부족하였는데, 창의성 함양 교육의 장점은 배우는 것에 대한 자극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교육 혹은 지식습득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종류의 교육이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탈자본주의사회에서 학교교육·직장교육·평생교육을 통해 지식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의 내용과 산업현장의 필요 사이에 괴리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범세계적 시장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이 어떤 학교, 어떤 학생, 어떤 교육자를 필요로 하는가를 학교에 전달하는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언론매체는, 범세계적 시장에서의 일반화된 변화를 사후적으로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세계적 시장에서의 새로운 변화의 징후를 찾아 일반 기업과 학교에 전해야 할 것이다.

산학간 협력교육훈련을 모색하여야

또한 기업의 연수·훈련·교육이 학교의 교육·훈련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산학간 협력연구처럼 산학간 협력교육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저자가 언급하였듯이 개방체제가 되어, 학교와 기업사이에 교육과 훈련, 혹은 계속교육과 재훈련에서의 동반관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협력교육훈련을 더 활발히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협력연구와 협력교육훈련이 물질 교류보다 인적 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평자 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1975)
- PECC사무국 연구담당 사무국장보(1990~92)
- 미국 Columbia 대학교 경제학박사(1985)
-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1985~현재)
- 세종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소장(1988~90)
-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연구위원(1993~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서비스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법인회원은 1구좌당 3인까지 무료)
-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후원회가입 안내문의 : (전화) 551-3334/7

(Fax) 551-3339

세계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2505

(서울 무역센터 우체국 사서함 112)

전화 : 551-3334 / 7 Fax : 551-3339